

# 2022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166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2년 3월 17일
4. 회부일자 : 2022년 3월 23일

### II.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방역체계 강화,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 2.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5조 3,688억 6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4조 2,449억 2천 8백만원에

대비하여 2.5%(1조 1,239억 4천 1백만원)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조 1,964억 9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8,311억 5천 1백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조 1,723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2,927억 9천만원) 증가하였음.

### <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45,368,869	44,244,928	1,123,941	2.5
일 반 회 계	32,196,499	31,365,348	831,151	2.6
특 별 회 계	13,172,370	12,879,580	292,790	2.3

### 3.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1) 세입

- 2022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변동없음.

#### < 경제정책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	842,674	-	-
일 반 회 계	-	821,499	-	-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	21,175	-	-

#### (2) 세출

- 세출예산은 당초 7,096억 9천 3백만원에서 338억원(4.8%) 증가한 7,434억 9천 3백만원임.

#### < 경제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743,493	709,693	33,800	4.8
행정운영경비	1,543	1,543	-	-
재 무 활 동	23,810	22,776	1,034	4.5
사 업 비	718,140	685,374	32,766	4.8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08억원(5.6%)이 증가한 5,804억 2천 8백 만원이 편성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0억원(2.1%)이 증액되었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음.

< 경제정책실 소관 회계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743,493	709,693	33,800	4.8
일반회계	580,428	549,628	30,800	5.6
도시개발특별회계	148,752	145,752	3,000	2.1
균형발전특별회계	14,313	14,313	-	-

- 주요 추경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에 191억 1천 9백만원을 증액함.
  - 도시제조업의 작업환경 개선과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88억 8천 7백만원을 증액함.
  - 4차 산업혁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청년 구직자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혁신거점별 미래인재 양성에 47억 6천만원을 편성함.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10억 3천 4백만원을 증액 하였음.

### Ⅲ.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

- 2022년도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상황의 개선과 내수 경제의 회복, 수출·투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경제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었음.
- 그러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주춤하고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
  - 두바이유 가격은 전년 말 73.2달러에서 올해 3월 25일 기준 111.9달러로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도 3.7%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함.
  - 소매판매액지수<sup>1)</sup>는 높은 물가상승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고, 민간소비가 위축되면서 전년 말 2.2%에서 2022년 1월  $\Delta$ 1.9%로 감소하였음.
- 지난 2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오미크론 확산과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0월(3.3%)보다 0.3%p 낮춘 3.0%로, 2023년은 2.9%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

1) 소매판매액지수 : 소비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표로,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전문소매점 등에서 매월 판매금액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통계임.

- 이에 정부와 국회는 악화된 방역상황과 강화된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가중된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6조 9천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확정하 바 있음(국회 본회의. 2. 21. 의결).
  - 2차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현금 지원사업(13조 5천억원)과 생활지원비, 자가진단키트 지원 등 기타사업(2조 8천억원), 예비비(6천억원) 등으로 편성됨.
- 그러나 최근들어 오미크론 확진자가 일평균 60만명을 정점으로 확산되고 물가불안·금리상승 등의 여파가 겹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검사·치료체계 전환으로 인한 방역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따라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된 자산·소득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상공인 등 경제 취약계층의 보호와 고용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이에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1조 1,239억 4천 1백만원 증액(2.5%)된 45조 3,688억 6천 9백만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야별 편성 현황 >

(단위 : 억원)

민 생 · 일 상 회 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위기업종 일상회복 지원(매출감소 소상공인 7.7만개소, 개소당 백만원 지원)</li> <li>▶ 소기업·소상공인 종사자 대상 2만명 규모 고용장려 및 고용유지 지원</li> <li>▶ 청년 재무상담(영테크) 4,500명 및 대중교통 요금 지원 75,000명 확대</li> <li>▶ 대중교통 재정지원(지하철 1~8호선 및 시내버스 각 1천억원, 마을버스 1백억원)</li> <li>▶ 문화·여가 향유 기회 확대, 하천 유지보수 등 녹색 여가공간 기반 조성</li> </ul>	4,248
방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취약계층 904천명 대상 자가검사키트 530만개 제공</li> <li>▶ 재택치료자 상담센터 4개소, 소아 전담 상담센터 1개소 설치·운영 등</li> </ul>	2,061
안 심 · 안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어린이집 20개소 확충, 외국인 아동 보육료 한시 지원 등</li> <li>▶ 서민주거 안정 기반마련(민간토지 활용 상생주택 70호 등)</li> <li>▶ 중대재해 예방 위한 도로시설물, 하천, 공원 등 안전관리 강화 등</li> <li>▶ 9호선 전동차 구매, 주택가 주차장 추가조성 등 교통인프라 조성</li> </ul>	1,130
의 무 경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li> </ul>	3,800

## 2. 경제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 가. 세 입

- 2022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변동 없음.

### 나. 세 출

- 2022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7,434억 9천 3백만원으로, 모두 15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338억원(4.8%)이 증액되었음.

- 이로 인해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0%에서 1.64%로 소폭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개 사업에서 308억원(5.6%)이 증액되면서 5,804억 2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와 서울형 뉴딜일자리, 뷰티도시서울 추진 등 10개 사업에서 274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음.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과 로봇 아카데미 운영 등 4개 사업에서 33억 1천만원이 순증되었음.

### <경제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추경안 세출 편성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 경 내 역
<b>경 제 정 책 실 합계</b>		(x19,702) 580,428	(x19,702) 549,628	(x-) 30,800	
<b>추가경정예산사업 계</b>		183,346	152,546	30,800	
경 제 정 책 과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4,972	3,845	1,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공지능 혁신허브연구개발 지원사업(1,000백만원)</li> <li>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 지원사업 (119백만원)</li> <li>증액분 위탁수수료(8백만원)</li> </ul>
	드론산업 활성화	550	50	500	드론 인재 양성 아카데미 시행
	로봇 아카데미 운영	700	-	700	서울로봇 아카데미운영
	뷰티도시서울 추진	2,980	2,100	8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뷰티산업 특화 전문인력양성 추진 (380백만원)</li> <li>중소 유망뷰티기업 마케팅 지원 (500백만원)</li> </ul>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2,000	-	2,000	중소기업이 채권 미회수 위험을 상쇄하는 보험료 지원
일 자 리 정 책 과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	67,229	57,229	10,000	안심일자리 목표인원 1,076명 증가
	서울형 뉴딜일자리	85,246	76,527	8,719	뉴딜일자리 목표인원 500명 증가
	청년 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조성·운영	400	-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담창구 조성(75백만원)</li> <li>전문컨설턴트 인건비(143백만원)</li> <li>탐방프로그램 등(182백만원)</li> </ul>
제조산업 혁신 과	도시형 제조업 (소공인) 지원	1,117	1,037	80	서울시 명장 선정 지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내역
	광역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10,713	7,713	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및 제조공정 디지털화(2,200백만원)</li> <li>▪뿌리산업의 체계적 지원(800백만원)</li> </ul>
	패션산업 기반 확충	4,905	3,105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류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지원 (1,800백만원)</li> </ul>
도농업과	국고보조금 반환	1,069	35	1,0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전안전부 국고보조금 정산액 반납금</li> </ul>
전략산업기반과	G밸리 IoT 아카데미 운영	210	-	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 대응 G밸리 IoT 산업 인재양성</li> </ul>
바이오산업과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	1,255	905	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li> </ul>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캠퍼스타운형 취업사관학교 추진 사업에서 30억원 (2.1%)이 순증되면서 1,487억 5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 경제정책실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편성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내역
<b>경제정책실</b>		<b>148,752</b>	<b>-</b>	<b>3,000</b>	
캠퍼스타운성과	캠퍼스타운형 취업사관학교 추진	3,000	-	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과정 운영(2,400백만원)</li> <li>▪인턴십 지원(300백만원)</li> <li>▪프로그램 운영(300백만원)</li> </ul>

### 3. 신규 사업 검토

#### 가. 로봇 아카데미 운영

(사업별설명서, 153쪽)

- 서울형 혁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로봇 산업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 로봇 아카데미 운영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A)	기정 예산 (B)	증감 (A-B)	증액내역
700	-	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관리비 700</li> <li>- 수강생 교육비 680</li> <li>- 교육 프로그램 자문 및 평가위원 수당 14</li> <li>- 모집 공고 및 포스터 제작 등 홍보비용 6</li> </ul>

- 로봇산업은 AI, IoT,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분야의 복합체이자 융합산업으로, 제조, 서비스, 콘텐츠 등 산업별 가치사슬이 다층적으로 연계돼 다양한 비즈니스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세계 로봇시장 규모는 2020년 약 25조 6천억원으로 연평균 9% 성장 중이고, 국내 로봇시장 또한 2019년 5조 3천억원으로 중국,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 규모의 로봇시장을 형성하면서 급성장하고 있음.
- 정부는 2008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제정하고 로봇산업을 4차산업혁명의 핵심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술개발, 보급실증, 인력양성 등에 예산(2021년 기준 1,950억원)을 투자 중임.

- 그런데 지난해 실시한 로봇산업 실태조사 결과<sup>2)</sup>에 따르면, 국내 로봇 기업들은 초기투자 비용 부담(40.0%), 전문인력(23.3%), 생산시설(12.3%), 기술경쟁력(11.5%)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서울시는 2021년 4월 로봇 전문기관과 로봇산업 종사자 교육 지원과 핵심 인력양성을 위해 협약을 맺고 개포디지털혁신파크(디지털 시민랩)에 서울로봇아카데미를 조성·운영하였음.
  - 서울시는 공유재산의 유상 사용허가와 관리비 지원을 담당하고, 전문기관(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전액 국비로 로봇시설 도입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 그러나 전문기관의 임차료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2021년 12월 말로 로봇아카데미 운영이 종료됨.
- 서울시는 로봇산업의 신규 기술인력 수요가 클 것으로 보고, 중단된 서울로봇아카데미의 지속적인 운영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로봇 전문기관을 선정해 취업준비생 1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무과정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비(6억 8천만원)와 프로그램 자문 수당(1천 400만원), 홍보비용(6백만원)으로 편성됨.

---

2) 2020년 기준 로봇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산업통상자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21.12.).

### < 로봇 아카데미 운영 사업개요 >

- 사업내용 : 로봇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
- 예산/운영: 700백만원('22년) / 전문기관 용역
- 시설위치 : 개포디지털파크 디지털시민랩(강남구 개포로 416), 행정재산
- 시설규모 : 연면적 499.68㎡/지상 1층~3층
- 교육기간 : 2022. 7~2022.12(2023년부터 상/하반기 운영)
- 교육인원 : 100명

-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로봇산업의 현장 수요에 대응해 맞춤형 실무인력을 주도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한정된 재원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 방식을 배제한 채 관리비와 사업비를 모두 서울시가 부담할 만큼 중요하고 긴급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나.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설명서, 161쪽)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외상거래 손실을 방지하고자, 매출채권보험료의 50%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위탁사업비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증액내역
2,000	-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li> <li>- 80만원×2,500개 업체</li> </ul>

-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의 외상거래(매출채권)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손실금의 최대 80%)을 지급함으로써,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망을 확충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신용보증기금이 수탁받아 운영 중임.
-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거래처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음.
  - 하이서울기업(총 1,015개사) 조사 결과, 매출채권보험 가입 기업은 총 74개사였으며, 이 중 64개사가 코로나19로 거래처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신규 가입하였음(2020. 5.).
- 지난 1월 서울시와 주요 경제단체(서울상공회의소, 중기중앙회, 서울경제인 협회)간의 민생경제대책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이 요청되었음.
- 서울시는 2020년 서울산업진흥원의 수출지원자금(5억원)을 활용해 150개 제조·서비스 분야 기업에 매출채권 보험료(최대 500만원)를 지원한 바 있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협의<sup>3)</sup>를 거쳐 지원한도(200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협의 및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수혜자 선정 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만원)는 낮추고, 대상(전업종)과 예산규모(20억원)를 확대해 수혜기업의 수를 늘리게 되었음.

### < 사업내용 변경현황 >

구분	2020년도	2022년도
지원대상	서울 소재 중소기업 (업종)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서울 소재 중소기업 (업종) 전업종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5백만원	기업당 최대 2백만원
예산규모	5억원	20억원
	서울산업진흥원 수출지원자금 전용	서울시 자체 예산편성
추진방식	(수행기관) 서울산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수행기관) 신용보증기금

- 이 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은 물론, 연쇄도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서울경제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용 중인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 구성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 주류·담배 관련 도·소매업 등을 보험계약 제외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어 추경안과 같이 모든 업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다. 청년 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조성 운영 (사업설명서, 174쪽)

- 청년과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일자리를 직접 연계하는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 청년 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조성 운영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A)	기정 예산 (B)	증감 (A-B)	증액내역
400	-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관리비 400</li> <li>- 일자리 미스매칭 완화 전담 창구 운영 용역 143</li> <li>- 전담창구 환경개선 75</li> <li>-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운영 182</li> </ul>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경력 중심의 채용시장 기조로 인해 청년 구직난이 심화되면서 지난해 청년 체감실업률<sup>4)</sup>이 2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반면에, 2021년도 하반기 민간사업체의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충원 인원’이 11만 4천명에 달하는 등 청년과 일자리 간 미스매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sup>5)</sup>.
-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 매칭 전담창구를 만들어 기업과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기업탐방 등의 기회를 제공해 적극적인 취업 연계를 모색하려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전담창구 설치 예정 장소인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역시 청년 구직자에 대한 청년취업 상담, 취업 종합지원과 현장 밀착형 취업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어 이 사업과의 뚜렷한 차별성이 보이지 않음.

4) ‘근로 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모두 실업자로 보고 계산한 것으로, 공식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았지만 한 시간 이상 일하지 못한 사람임.

5) ‘사업체 노동력 조사’, 고용노동부(2021.12.29.).

## <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사업 개요 및 시설구조도 >

- 사업목적: 청년 구직자에 대한 취업 종합지원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현장 밀착형 서비스 확대로 청년 구직활동 지원 강화
- 위치·규모: 중구 장교동 장교빌딩(1층, 1,108㎡)  
※ '17.3.24 개소
- 주요시설: 취업상담창구, 스터디룸, 세미나실, 다목적홀 등
- 근무인원: 공무원 상담사 8명, 일자리카페 뉴딜참여자 8명
- 운영시간: 평일 오전9시~오후9시 / 토 오전9시~오후6시
- 지원내용: 구인구직 상담, 커뮤니티 공간 대여, 모의 면접, 취업특강 등
- 이용대상: 만15세~39세 이하 청년구직자
- 소요예산: 190백만원(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예산 활용 )



-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에 앞서 ‘서울시 청년 일자리센터’의 본연의 기능인 ‘일자리 매칭 상담 기능 강화’ 사업에 대한 철저한 성과관리와 사업쇄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라. 캠퍼스타운형 취업사관학교 추진

(사업설명서, 193쪽)

- 서울시와 대학의 대표적 협업 체계인 캠퍼스타운을 활용해 4차산업 혁명 맞춤형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3개 대학(고대, 연대, 시립대)에서 취업사관학교를 시범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 3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청년취업사관학교 플랫폼과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분야 취업역량 교육과정(4개월) 운영비 24억원, 인턴십 희망 창업기업과 교육생을 매칭하는 교육생 인건비 3억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 3억원으로 편성됨.

### < 캠퍼스타운형 취업사관학교 추진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증액내역
3,000	-	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li> <li>- 교육과정 운영 2,400</li> <li>- 인턴십 지원 300</li> <li>- 프로그램 운영 300</li> </ul>

### < 대학별 세부산출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예산	비고
<b>합 계</b>		<b>1,000</b>	
교육과정 운영	인당 8백만원 x 100명	800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비 기준
인턴십 지원*	인당 9,160원 x 40시간(1주) x 8주 x 0.7 x 50명	100	창업기업 희망 인턴십 임금(약 220만원) 대비 약 45%
프로그램 운영	직원 인건비, 기타 운영비용 등	100	일자리 연계프로그램 포함

-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2023년부터 캠퍼스타운 종합형 전 대학(15개교)으로 확대 운영하고, 2025년까지 총 6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 기업현장의 인재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신기술 분야에 취·창업 의지가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기업 수요에 부응하고,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음.

- 다만, 4차산업혁명 분야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존의 청년 취업사관학교사업과 대상과 목적이 유사하고, ▶ 창업육성, ▶ 주거 안정화, ▶ 문화특성화, ▶ 상권활성화, ▶ 지역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캠퍼스타운 사업의 정책 목표와 일치하지 않아 사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와 조정이 필요함.
- 또한, 대학별 수요조사와 경쟁없이 시범대학 3개소를 임의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도적적 해이가 우려되고, 인재양성이란 대학의 본연의 역할을 대학의 자부담 없이 서울시가 전액 재정지원을 하면서까지 신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 한편 예산은 관련 법령과 조례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집행해야 함.
-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비 등으로 용도가 한정된 도시개발특별회계<sup>6)</sup>에서 일반회계 성격의 교육운영비를 편성·집행하는 것은 일반회계·특별회계 분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운용방식임.

---

6) 「도시개발법」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
4.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마. G밸리 IoT 아카데미 운영

(사업설명서, 196쪽)

- 4차산업혁명 기술의 고성장 기조에 따라 핵심기술인 IoT(사물인터넷) 분야의 실무형 인재 양성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G밸리 IoT 아카데미 운영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증액내역
210	-	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관리비 210</li> <li>- 용역비 185</li> <li>- 홍보비 22</li> <li>- 회의비 3</li> </ul>

- 4차산업혁명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트렌드가 업무, 학업, 일상 등 생활영역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면서 핵심 기술인 IoT 기술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향후 5년간 IoT 국내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세계 성장률(6.7%) 보다 높은 7.9%<sup>7)</sup>로 전망되고 있지만, 기업 실무에 적합한 현장형 산업기술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통상자원부는 IoT 가전 산업기술인력 규모가 2018년 31,102명에서 2020년 68,831명으로 증가하고, 2030년에는 108,965명 이상으로 연평균 4.7%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7) 출처: IT 시장조사업체 ‘한국 IDC’ 발간물 「월드와이드 블랙북: 제3의 플랫폼 에디션」 (2021년)

- 이에 서울시는 IoT 관련 교육기관에 용역을 맡겨 G밸리 IoT 분야 종사자, 취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G밸리 창업복지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임.
- 현재 서울시는 IoT를 포함한 4차산업혁명 분야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청년취업사관학교(이하 “SSAC”)를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1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2021. 9.26.).
- 서울산업진흥원(SBA)이 대행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IoT 분야를 포함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웹,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4차산업혁명 분야의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운영 중임.

**< SSAC 개설과정 >**

연번	방식	교육분야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인원
1	교육 기관 개설	인공지능	영상 처리를 위한 인공지능(머신러닝/AI) SW 개발자 양성 과정	6개월 (900H)	22
2		빅데이터	R.Python을 활용한 빅데이터 예측 분석 전문가	6개월 (960H)	22
3		웹	웹 기반 AI 융합 개발자 양성 과정	6개월 (288H)	24
4		IoT/ 로봇	Linux/ROS기반 IoT/로봇 임베디드 SW개발자 전문과정	6개월 (756H)	22
5	현업 개발자 개설	인공지능	pytorch 기반의 실전 문제풀이 디버깅 과정	3개월 (112H)	10
6		웹	스타트업에서 요구되는 풀스택 개발자 양성 과정	3개월 (133H)	10
7		앱	Flutter 기반 멀티 플랫폼 모바일 앱 개발자 데뷔 과정	3개월 (120H)	10

- 따라서 이 사업은 시급성과 예측불가능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추경 사업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청년취업사관학교와의 목적, 운영방식, 사업 성격, 지원대상 등이 유사·중복되는 만큼 사업방식의 재설계가 필요함.

#### 4. 주요 사업 검토

##### 가.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사업별설명서, 145쪽)

- 정부와 공동으로 서울의 산학연 R&D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속 및 신규 선정 예정인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대응투자<sup>8)</sup>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11억 2천 8백만원(29.3%) 증액된 49억 7천 2백만원이 편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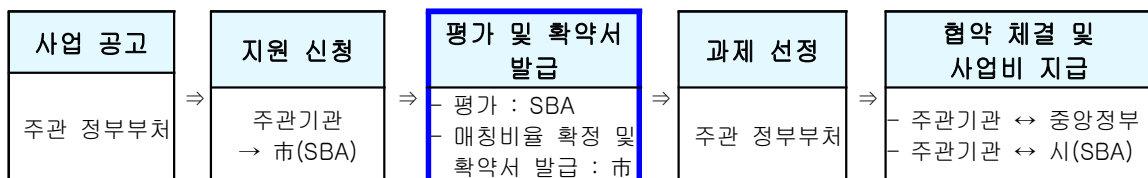
#### <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증액내역
4,972	3,845	1,128	■ 민간위탁금 1,128

- 이 사업은 서울시 예산편성 이후 정부가 사업공모를 하면 서울소재 연구기관 등이 대응투자 협약서를 서울시(SBA)에 요청해 공모신청과 선정 절차 등을 진행하는 구조임.

#### < 사업추진 절차 >



8) 정부지원 대응투자 사업은 정부 R&D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대비 10%내외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 서울산업진흥원이 수탁하고 있음.

○ 그동안 서울소재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 인재양성, ▶ 혁신 중소기업 지원, ▶ R&D 저변확대, ▶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을 중점 지원해 서울시의 혁신기반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하고 있음.

- 2022년 현재까지 학술지 논문 2,839건, 지식재산권 출원 1,304건, 기업지원 387건, 연구인력 양성 25,284명 등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

### < 정부지원 대응투자 사업의 연도별 성과 >

(단위 : 건, 명)

사업년도	과학기술연구성과			지식재산권		사업화 및 연구성과활용			인력양성	
	학술지 논문	학술대회 발표	수상인증 /포상실적	출원	등록	기업지원	사업화	서울시정 활용기술	연구인력 양성	연수지원
2005-2011	1,832	4,440	157	361	186	20	7	6	4,761	3,689
2012	254	663	27	57	37	7	27	0	450	119
2013	169	553	52	85	18	16	16	3	5,562	97
2014	42	68	46	77	0	20	27	2	6,225	79
2015	25	44	91	67	0	30	0	5	7,015	84
2016	45	50	74	32	13	1	20	6	306	59
2017	64	101	97	122	41	29	24	4	161	100
2018	54	90	92	116	38	1	42	2	100	87
2019	82	81	86	122	49	43	12	5	192	8,453
2020	114	86	101	87	18	116	33	5	311	111
2021	158	305	139	178	58	104	52	8	201	559
계	2,839	6,481	962	1,304	458	387	260	46	25,284	13,437

○ 증액된 R&D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인공지능 혁신 허브 연구개발사업’은 산학연의 인공지능 역량을 결집해 최고 수준의 기술과 인재 확보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려대에 5년간 44억 5천만원을 지원함(2021. 8월 선정).

-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사업’은 대학 특성에 맞는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창의적 공학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sup>9)</sup>으로, 6년간 총 7억 1천 4백만원을 광운대학교 외 6개 대학<sup>10)</sup>에 지원함 (4월 산업통상자원부 선정예정).

###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사업 중 증액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소관부처	선정기관	사업기간	전체 지원금액 ('22년 지원금)	공모 지원조건	비고
합계					5,164 (1,119)		
1	인공지능 혁신허브	과기부	고려대	5년	4,450 (1,000)	기관부담분은 국외 10% 이상(현금)	총 연구개발비의 10% 서울시가 지원
2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	산업부	광운대 외 6개 대학	6년	714 (119)	기관부담분은 국외 10% 이상(현금)	총 연구개발비의 10% 서울시가 지원

- R&D 과제 지원 사업은 본예산 성립 이후 정부 매칭 사업의 신규 선정과 변경된 여건 등으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불가피하게 증액되어 왔음.
- 다만, 지난해 8월 선정된 ‘인공지능 혁신허브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했던 2차년도 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합리성과 예측성을 저해한 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9)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사업은 단계별 추진사업으로 1단계(2007~2011) 4개교, 2단계(2012~2021) 7개교를 지원 한 바 있으며, 신규 과제로 3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10) 광운대(지능형 로봇), 동국대(IoT 가전), 서울시립대(저탄소에너지), 숭실대(지능형로봇), 이화여대(저탄소에너지), 연세대(저탄소에너지), 홍익대(저탄소에너지) 임.

나. 뷰티도시서울 추진

(사업별설명서, 157쪽)

- 뷰티산업에 특화된 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과 중소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우수제품 홍보를 위한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8천만원(41.9%)을 증액하고 있음.

< 뷰티도시서울 추진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증액내역
2,980	2,100	8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관리비 880</li> <li>- 전문인력 양성 추진 380</li> <li>- 유망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500</li> </ul>

- 서울은 대표적 뷰티산업인 화장품 유통·판매의 거점이자 전국에서 뷰티 서비스업(피부, 이·미용)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나,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부진으로 뷰티 소비의 중심인 동대문과 명동 등의 상권이 크게 위축되었음.
- 이에 올해 뷰티업종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뷰티복합 문화공간 운영(19억 5천만원), 뷰티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3억원), 한류 연계 뷰티상품 제작지원(2억 8천만원), 뷰티산업지원사업 홍보(2억 6천만원), 뷰티산업주간 행사 추진(12억 9천만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다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서울형 뷰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이 진행 중이고, 편성된 세출예산 과목의 오류, 사업의



유사·중복성 등을 고려해 사업이 일부 감액 조정(43억 5천만원→28억원)되었음.

### < 뷰티도시서울 예산편성 현황 >

통계목	본예산(안)	본예산	추경(안)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류 연계 뷰티상품 제작지원(2억 8천만원)</li> <li>- 뷰티복합문화공간 운영(19억 5천만원)</li> <li>- 뷰티산업지원사업 홍보(2억 6천만원)</li> <li>- <del>뷰티업컨설팅 지원(2억원)</del></li> <li>- 뷰티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3억원)</li> <li>- 서울뷰티허브 조성 기본구상용역(2천만원)</li> <li>- 자문회의 운영(5천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뷰티복합문화공간 운영(9억원)</li> <li>- 뷰티도시서울 홍보(7천만원)</li> <li>- 서울뷰티허브 기본구상용역(6천만원)</li> <li>- 자문회의 운영(2천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인력 양성 추진(3억 8천만원)</li> <li>- 유망중소기업 마케팅 지원(패키지 제작 3억원, 미디어콘텐츠 제작 2억원)</li> </ul>
행사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뷰티산업주간 행사 추진(12억 9천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사업으로 분리 운영(7억원)</li> </ul>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뷰티복합문화공간 조성 공사비(9억 5천만원)</li> </ul>	
자산및물품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뷰티복합문화공간 조성 물품구매비(1억원)</li> </ul>	

○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획·마케팅, 유통 등에서 산업 특화 인력이 부족한 뷰티업계 특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통해 뷰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뷰티산업 전문인력양성(3억 8천만원)은 교육장소 임차비용(보증금 1억 2천만원, 월임차료와 관리비 8개월분, 8천만원)과 브랜드 매니저 등 4개 교육

프로그램(화장품 조제관리사, 홍보전문가, 창업) 운영비(1억 8천만원)를 편성함.

- 유망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5억원)은 30개 업체에 각각 1천만원의 포장 용기 제작비용을 지원(3억원)하고, 25개 업체에 유튜브, SNS 등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비 8백만원을 편성함(2억원).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뷰티업계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뷰티업계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집중하는 것은 기업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폐합 하거나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에서 뷰티업계만을 위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2022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 일부를 이번 추경안에 재편성한 것은 의회의 심사·의결 권한을 경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이밖에 ‘보증금’은 ‘기타자본이전(무형고정자산)’으로 편성해야 하나, 이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 예산과목(통계목)의 수정이 필요함.

## 다. 일자리 관련 추경사업

·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별설명서, 164쪽)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별설명서, 169쪽)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사업인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에 100억원, 경력형성형 일자리 사업인 서울형 뉴딜일자에 87억 1천 8백만원을 증액하였음.

### < 일자리 관련 추경사업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A)	기정 예산 (B)	증감 (A-B)	증액내역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67,229	57,229	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336</li> <li>■ 사무관리비 711</li> <li>■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53</li> </ul>
서울형 뉴딜일자리	85,245	76,527	8,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929</li> <li>■ 사무관리비 168</li> <li>■ 민간경상사업보조 1,923</li> <li>■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99</li> </ul>

-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경제 규모가 위축되면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 정보·인프라 격차 등으로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서울시는 2020년부터 2조원이 넘는 대규모 일자리 사업예산을 편성했으며, 올해는 2조 2,228억원을 조성하는 등 일자리 예산을 꾸준히 확대하여 왔음.

### <서울시 일자리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2.
일 자 리 예 산	11,482	15,810	20,700	21,727	22,228

- 그런데, 일자리 예산 확대 기조와 달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을 지원하거나, 청년, 경력단절자 등에게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예산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 실제 지난 3년간 해당 사업들의 예산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의 경우 2020년 대비 80.7%,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23.7%가 각각 감소하였음.

###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서울형 뉴딜일자리 예산추이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서 울 시 민 안 심 일 자 리	(x223,375) 295,957	(x-) 72,281	(x-) 57,229
서 울 형 뉴 딜 일 자 리	(x-) 100,264	(x-) 84,129	(x-) 76,527

-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서울시민 안심일자리’는 지난해 3,229개 세부사업에 114만명의 취약계층이 참여했고(목표대비 124%),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2020년과 2021년 목표 인원 달성도 95% 이상의 성과를 보였으며, 지난해 참여자 만족도는 최고 수준인 88.8%로 나타남.

- 이들 사업의 성과와 사회적 요구에 따른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예산 규모 확대는 합리적인 예산 선택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는 추경이 아닌 올해 본예산 편성 시에 우선순위가 높게 반영 되었어야 했음.

라.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사업별설명서, 177쪽)

- 도심제조업 분야에서 기술발전에 공헌한 숙련기술인을 대상으로 서울시 명장 선정과 기술장려금, 교육연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8천만원을 증액한 11억 1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서울시 명장 10명을 선정하여 월 50만원(3년간) 범위에서 6개월간 개인당 최대 3백만원을 기술장려금으로 지원할 예정임.

<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증액내역
1,117	1,037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관리비 50</li> <li>■ 기타보상금 30</li> </ul>

- 이 밖에 명장선정 심사비, 증서, 기타 심사준비 관련 비용(1천 4백만원), 장인 기술교류 및 연수추진(2천 4백만원), 장인 기술교육원 특강비 지원(1천 2백만원) 등의 사무관리비 5천만원을 반영하였음.

**<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명장 선정 지원	=	50,000천원
	- 명장선정 심사비, 증서, 기타 심사준비 관련 비용	=	14,000천원
	▷ 명장선정 심사비 200,000원*10명	=	2,000천원
	▷ 증서 및 현판지원 500,000원*10명	=	5,000천원
	▷ 기타 심사 준비 등 사무관리비 7,000,000원	=	7,000천원
	- 장인 기술교류 및 연수추진 1,200,000원*10명*2회	=	24,000천원
	- 장인 기술교육원 특강비 지원 600,000원*10명*2회	=	12,000천원
	증감사유		
	동일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공헌한 명장을 선정하고 연수하는 금액을 반영하여 숙련기술인 자긍심 고취 및 숙련기술 저변 확대		
기타보상금	○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명장 선정 지원	=	30,000천원
	- 서울시 명장 기술장려금 지원 500,000원*10명*6개월	=	30,000천원
	증감사유		
	도심제조업 명장을 선별한 후 장려금을 지급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장기적인 기술력 보존에 기여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정 (2016. 7.) 이후, 서울시와 전국 단위의 기능대회 운영을 지속해 오고 있으나, 숙련기술인 선정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 명장선정 지원을 통해 도시형 제조업 숙련 기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산업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이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인 시급성과 필요성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서울시 명장에 해당하는 ‘우수 숙련기술인’ 을 ‘최고장인’ 으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2022. 3.10.)된 상황이므로 조례와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마.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별설명서, 182쪽)

- 뿌리산업<sup>11)</sup> 진흥을 위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도시형 소공인(기계 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을 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30억원을 증액한 107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증액내역
10,713	7,713	3,000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

- 이 사업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지원(18억원)은 위험·위해 환경요인에 취약해 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도시형 제조업체를 대상(300개)으로 업체당 6백만원을 지원함.

11)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공정산업임.

- 제조공정 디지털화 컨설팅(2억원)은 제조공정 효율화, 제품 불량원인 분석, 설비·장비 프로세스 등 제조공정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업체당(40개) 5백만원을 지원함.
- 스마트공방 구축(2억원)은 뿌리기업에 대한 IoT, 로봇 등 첨단기술의 제조공정을 개선하고 공통 솔루션 구축 지원 및 솔루션 연동을 위한 자동화정비, 센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10개) 2천만원을 지원함.
- 뿌리산업의 체계적 지원(8억원)은 기술개발 중심의 R&D형 맞춤형 패키지 지원 5억원(10개 업체×5천만원), 기계금속 산업박람회 참가지원 2억원(40개 업체), 주력제품 및 시제품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 1억원으로 구성됨.
- 도시형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뿌리산업은 코로나19 확산과 내수 부진,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한 어려움과 열악한 작업환경, 노후화된 시설물, 신기술 역량 및 디지털 전환 미흡, 인력의 고령화와 신규 인력 부족 등으로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도시형 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 등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코로나19 이후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판단됨.



- 다만, ‘뿌리기업 온라인 플랫폼 구축’ 과 같이 시스템 운용 환경을 신규로 구축하는 정보화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정보화 타당성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함<sup>12)</sup>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바, 관련 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함.
- 또한, ‘작업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업종을 대상으로 총 300개 업체에 최대 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나, ‘의류 제조업’ 의 경우는 별도의 추경사업인 ‘패션산업 기반 확충’ 을 통해 700개 업체에 최대 8백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므로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바. 패션산업 기반 확충

(사업별설명서, 188쪽)

- 의류제조업체의 작업환경개선<sup>13)</sup>을 통해 의류제조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18억원을 증액한 49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12)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① 주관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사업 계획서, 산출내역서 등(이하 "심사요청자료"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예산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화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제2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3.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4.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13) 자치구 공모, 사업비 매칭 지원(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

- 서울소재 의류제조업 소공인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 지원금(16억원)<sup>14</sup>과 의류제조업체 맞춤형 작업환경개선 추진을 위한 사전 실태조사 및 성과관리 용역추진비(2억원)를 반영하였음.

### < 패션산업 기반 확충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증액내역
4,905	3,105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관리비 200</li> <li>■ 자치단체자본보조 1,600</li> </ul>

- 당초 본예산에 24억원을 편성하여 총 400개 업체를 선정·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침체된 도심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역비를 증액(3억 → 5억)하고, 지원대상(400개 → 700개)을 확대하여 기업당 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최대 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임.
- 작업환경 개선 대상은 소화기, 누전차단기, 노후배선 정리, 방음 설비 등 위험요소제거 분야 10종과 집진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LED 조명 등 근로환경 개선 분야 13종, 재단테이블·작업대 등 작업 능률향상 분야 7종 등 총 30종임.

### < 기본환경 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설비 지원 세부 내용 >

구 분		지 원 사 항(예시)	비 고
기본 환경 개선	위험요소제거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설치(필수) 노후배선정리, 흡음·방음설비, 순환식 보일러 등	전문가 컨설팅 후 지원품목 최종확정
	근로환경개선	덕트, 산업용흡입기, 환풍기, 집진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LED조명, 바닥개선공사, 화장실개선공사 등	
작업능률향상		바퀴다이, 서버모터, 자동재단 테이블, 작업대 등	

14) 의류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지원 5,333,333원×300개 업체= 16억원(구비 지원 별도)

- 이 사업은 열악한 의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공정 개선 지원을 통해 제조산업 활성화 여건 조성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노동자 작업능률 향상  
등의 성과지표 개선이 뚜렷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철저한 성과  
관리를 바탕으로 예산 규모를 확정해야 할 것임.

#### 사. 도시농업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

- 2020년도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 2020년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
- 2021년도 양곡관리사업
- 2021년도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바우처 사업
- 2021년도 양봉산물 정보제공
- 2021년도 도시텃밭 조성사업
- 2021년도 농촌일자리 지원사업
- 2021년도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난 2년(2020~2021)간  
도시농업 관련 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0억 3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2020년도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등 2개 사업 집행잔액 7천 7백  
만원과 2021년도 9억 5천 7백만원(6개 사업)임.

### < 도시농업과 국고보조금 반환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증액내역
1,069	35	1,034	■ 국고보조금반환금 1,034

-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2020년)’,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2021년)’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실제 참여율이 저조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음.

### < 국고보조금 반환 세부내역 >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2020년	반환금	2021년	반환금
<b>2개 세부사업</b>	<b>76,639</b>	<b>6개 세부사업</b>	<b>957,687</b>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76,085	양곡관리사업	1,511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	554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바우처 사업	307
		양봉산물 정보제공 사업	2,544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	1,832
		농촌일자리 지원사업	1,872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949,621
		반환금 합계	1,034,326

- 이들 사업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집행잔액이 연계적으로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반복되고 있어 적정 규모의 지출수요 산정이 요구됨.
-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집행 노력과 함께 결산 이후 지체 없이 국고보조금이 반환되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시우	02-2180-8056
김용우	02-2180-8062
박은샘	02-2180-8064